

전남광주, 투자기관 설립 ‘시동’…기업 유치·투자 전담

반도체·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대상
기본계획 용역…운용 필요 등 진단
시민공유자산펀드 조성…수익 환원
내년부터 행안부 협의 등 절차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업 유치와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전담할 투자기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유자산펀드’도 조성해 투자 수익이 다시 지역 산업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투자기관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적절한 설립 형태와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사업비는 약 1억원이다.

투자기관 설립 논의는 지난 8월부터 구체화됐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간담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무안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제3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기획위원회가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투자를 전담할 ‘전남광주투자공사’ 설립과 시민공유자산펀드 조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시는 이후 투자기관설립추진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별시가 자체 투자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적절한 기관 형태와 사업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고, 직접 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 관련 인허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별시는 제도적 요건과 공공성, 투자 가능

등을 종합해 적절한 설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기관은 기업 유치와 지역 투자사업을 연계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특별시 관련 부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나뉜 기업 유치 업무를 연계해 국내외 기업

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인프라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금융 기능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첨단기업 유치가 필요한 부지와 전력·용수, 교통망, 인력 등의 지원 기능을 연계해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수익을 지역과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공유자산펀드’ 조성도 함께 검토한다. 시민과 공공부문 등이 조성한 자금을 전략산업과 공공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 산업에 재투자하거나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투자기관 설립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기관 형태에 따라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 설립 심의,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투자기관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현재는 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사업 범위, 설립 형태 등을 검토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특별시 지방직 부시장 후보자 6·7일 인사청문

시민주권특위 위원장 박성재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임형석

12일까지 경과보고서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직 부시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6·7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는 1일 시민주권부시장·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제1차 회의를 각각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했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부위원장에는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이 선출됐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을 위

원장으로, 박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 일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6·7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은 지난달 2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6·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를 거친 뒤 청문 종료 후 경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오는 12일까지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특별시 시정에 대한 정책 역량과 비전, 공직관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박성재·임미란·김진남·고경애·김건안·문예준·박정선·박상길·윤민호·서영배·박수민·박준엽·박진한·박민영·노진성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백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는 임형석·전경선·심철의·손남일·박필순·김강현·김미연·강원호·이숙희·김수권·강광석·이현명·임용민·박만·장성해 의원이 참여한다. /변은진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내년 전면도입 ‘속도’

진보당 시의원-민 시장 정책간담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의 2027년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1일 무안청사에서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원 5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어촌기본소득과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민 시장은 “민주당과의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살펴보고 있으며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광석 의원(강진)은 “전남광주 통합의 일차적 효능감은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나온다”며 “광주의 반도체와 전남의 기본소득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별시 차원의 단계적·점진적 적용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진보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민 시장은 “노동권 보장이 평소 소신”이라며 반도체 법 건설에 지역업체와 지역 노동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부시장 후보 청문 요청 전부터 ‘행정지원’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요청하기 40여 일 전부터 사무공간과 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주요 현안까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특별시는 지난 8월10일부터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후보자에게 청사 내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등을 제공했다.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지난달 2

2일보다 49일 앞선 시점이다.

지원은 사무공간과 인력제공에 그치지 않았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부서별 주요 업무와 특별시 주요 현안·쟁점, 의회 지적사항과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백 후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국별 업무공유 계획이 마련됐다. ‘균형발전부시장 소관 예정 실·국별 업무공유회 계획’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소관 예정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업무공유와 후보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별시는 관련 법에 따른 인사청문 준비와 후보자의 업무 숙지를 위한 행정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백 후보자도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현황 파악”이라며 “청문회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 역시 “부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인사청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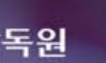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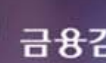
특별시, 43일 전부터 사무공간·인력 제공

주요 현안·쟁점 공유에 실·국별 업무보고도

市 “업무 숙지”…박민영 “시점 명확해야”

반면 의회에서는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26.3.25. (수) ~ 10.31. (토)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 정비센터가 관계자 3,000만원